

컨테이너 스마트팜, 빈 땅 활용·환경보호·일자리 '1석 3조'

광주시 북구 '도시농업 선도모델' 관심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 팜 오늘 개장
유휴부지 1000여대 설치
노인·청년 500명 일자리 기대

광주시 북구가 도심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1석 3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심 자투리땅에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컨테이너 스마트 팜'을 설치해 청년과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광주 자치단체에서 스마트 팜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도시농업의 선도모델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 북구 우산동 북구 새마을회 주차장에서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 팜 개장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주민 제안-공모사업에 주민과 북구새마을회가 제안해 채택됐다. 북구청 산하 광주북구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북구 새마을회는 공공부지지만 면적이 작은 땅에 활용하지 못하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스마트 팜을 설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북구에는 11㎡의 작은 부지부터 4099㎡달하는 땅까지 총 87곳(총 1만 7810㎡·5390평)의 유휴부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북구는 스마트 팜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은 40㎡(12평) 규모로 면적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농작물을 6단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부지 사용 대비 많은 양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컨테이너 스마트 팜에서는 열채류(상추,배추 등) 최대 600kg까지 재배가 가능하다. 기후 위기로 노지 재배 작물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북구는 컨테이너 스마트 팜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과 청년이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는 '도시형 농업'으로까지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지자체가 직접 컨테이너 스마트 팜을 설치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광주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 안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지만 컨테이너형이 아닌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설치된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북구 새마을회 회원들이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새마을회 제공〉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공간 제약 없이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반 농업기술이다. 온·습도 등을 자동제어할 수 있고 식물 성장 모니터링 등도 가능하다. 컨테이너 스마트 팜은 첨단 농작물 관리시스템을 컨테이너형 공간에 구축한 것이다.

광산구의 경우 빈집 철거 부지인 비아동과 산월동, 수완동, 도산동의 공터에 마을 공용 텃밭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노지 재배에 그쳤다. 북구는 적은 부지만으로도 설치가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유휴부지에 1000대 가량 설치해 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는 스마트팜 컨테이너에서 농사를 짓고 판매하면 최소 500명 이상의 노인·청년에게 소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스마트 팜 도입으로 북구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도시에서 재배해 공급하는 '도시형 농업' 방식으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노인과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딤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한다

정부, 입법 추진 나서 제작·유통 처벌 강화

정부가 딤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딤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딤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별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딤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

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딤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딤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딤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초빙공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보자 등록서류 안내

등록 접수처	접수기간	서류 목록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2024.09.09.(월) ~ 09.10.(화) [2일간]	· 후보자등록 신청서(필수) · 재직증명서(필수)<해당자> · 보직사퇴서(필수)<해당자> · 기탁금 원납증명서(필수) · 사진(5×7) 2매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추천서(필수)<해당자> · 범죄경력회보서(필수) · 후보자 정보등 입력자료
총장임용추진위원회	2024.09.09.(월) ~ 09.10.(화) [선관위 후보자 등록 후 즉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2일 내]	· 후보자 등록 접수증 사본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첨부서류 제외) · 이력서 · 공적추천서 사본 · 공약준수 서약서 ·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 공적추천서 사본 · 소견서 및 공약사항

후보자 등록방법: 현장접수

· 선관위: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15)
· 총추위: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기타사항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선거 홈페이지(https://president22.jnu.ac.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부인사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총장임용추진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후보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진위원회 사무국(062-530-5960/5962)

2024년 9월 2일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진위원회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2,423,808,600원
토지가격: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379,363,600원 (구 101.5평)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상담문의 · 010-6648-0725